

식당·카페 QR 중단...“편한데, 관참을까”

오미크론 대유행...신규 확진자 21만9241명 확산세와 별개로 QR체크인은 1일부터 중단

정부가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중단하면서 QR체크인 등 절차 없이 식당이나 카페가 이용 가능하자 “편리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감염 사태가 확산하자 방역 긴장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온다.

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1만9241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수가 20만명을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불과 일주일 전(17만1451명)보다도 5만명 가까이 늘었는데,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감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모양새다.

확산세와 별도로 식당과 카페, 유흥 시설 등 11종에 적용하던 방역패스는 전날부터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부분 식당과 카페는 방역패

스를 위해 설치했던 QR코드 인증용 태블릿PC나 휴대전화를 치웠고, 방역패스 안내문도 제거했다. QR체크를 위해 가게 입구에 긴 줄이 늘어섰던 풍경도 사라졌다.

4개월 가까이 지속되던 방역패스가 사라지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우선 “편리해서 좋다”는 반응이 많다. 매일 출근해 외부에서 식사를 하는 박모(33)씨는 “식당을 가도 별도로 찍을 필요가 없어지니 편리하다. 이제 곧 마스크를 벗을 날도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백모(31)씨도 “미접종자 입장에서 정말 이제야 숨통이 조금 트인다”며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조치였고, 백신패스가 있다고 특별히 개인 방역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일부 시민들은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백신 패스를 중단한 것을 두고 불안하다는 반응도 보인다.



회사원 이모(30)씨는 “최근들어 주변에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확진자 수도 많아졌는데 방역 긴장을 풀어도 관참을까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강모(32)씨도 “일반 사람들은 관참겠지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층에게는 정부 정책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도 “어제부터 QR체크를 하지 않다보니 자연스럽게 출입이 가능하다”며 “손님들이 빈번하게 오가다

보니 아직까지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방역패스 중단 후 외출을 자제하고 개인 위생에 더 신경 쓰게 됐다는 이들도 있다.

30대 회사원인 박모씨는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 어제는 아예 집 밖을 나가지 않았다”며 “방역패스가 사라져 편리하기는 한데, 개인방역 수준이 당장 높아지길 기대할 수는 없으니 몸을 사리게 됐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보성경찰, 개학철 어린이보호구역 합동점검 실시

보성경찰서(서장 오임관)는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보성군청, 교육청,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하였다.

보성=김덕순기자



나주 금성지구대,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현장간담회 실시

나주경찰서 금성지구대(대장 김진희)는 신학기를 맞아 지난 2월 28일 금성지구대 관내 나주상업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폭력 예방 간담회를 가졌다.

기동취재본부



고흥경찰, 국가 수사 자치경찰 추진 종합계획 보고회 개최

고흥경찰서(서장 송경 고영재)는 경찰서장, 각 과장, 계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과 함께하는 국가 수사 자치경찰 추진 종합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무안소방, 주택화재에서 거동불편 할머니 구한 용감한 안전영웅

무안소방서(서장 박의승) 무안군 용월리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주택 내부에 있는 거동불편한 할머니를 이웃 주민이 인명구조를 한 사례를 홍보하고 있다.

무안=이기성기자



광양소방, 중동 주택화재 이웃주민이 소화기로 초기진화

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광양시 중동 소재 단독주택 보일러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이웃주민 김모 씨(40대)가 집에 있는 소화기로 초기진화 하여 피해를 최소화 했다고 밝혔다.

광양=심종섭기자



완도해경, “이제 도선에서 응급처치 가능해요”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경수)는 섬마을 해상 교통수단이자 다중이용시설인 도선에 자동 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하여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초동조치 여건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완도=이민혁기자



‘힘내세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7일째인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에서 기부금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한 한 시민이 계좌이체로 기부하고 대사관 직원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 벽보 훼손 70대 검거

성북구, 동대문구 일대에서 총 8점 훼손



서울 곳곳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전날(1일) 74세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과 28일 서울 성북구, 동대문구 일대에서 이 후보의 선거 벽보 총 8점에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훼손된 벽보를 수거해 지문 감식을 의뢰했으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해 A씨를 주거지에서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에서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같은 혐의로 이날 중앙경찰서에서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슬비기자

정부 “격리해제자 진료 거부병원, 의료법 위반”

“동네 병·의원 진료 활성화되면 사라질 것”

정부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가 해제된 소아의 진료를 거부한 일부 병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격리 해제된 환자에 대한 진료조건으로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이것이 없다고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이의 의료계와 협의하고 현장에도 통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일부 의료현장에서 코로나 의심 환자나 격리해제 환자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앞으로 동네 병·의원의 진료가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분위기가 빠르게 없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시 한번

정드리지만 대면 진료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의료진들이 함께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박항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도 “진료 거부는 의료법 위반이다. 세부적인 처벌이 어떤 내용인지는 추가로 보완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의심환자나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대한 병원의 진료거부 문제는 꾸준히 발생하는 실정이다.

지난달 23일에는 열이 나는 영유아의 진료를 거부한 사례에 대해 정부가 “면밀히 지도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선욱기자

정부 “오미크론 치명률 낮아 거리두기 강화 효율성 떨어져”

오늘 일상회복위...거리두기 조정 필요성 논의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을 고려할 때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의 강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 모임 6인, 다중시설 이용 시간 오후 10시 제한 등이다.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대통령 선거(대선) 이후인 13일까지 유효하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의) 치명률 자체는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강화할 효율성 자체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로

서는 확진자 억제보다는 중증·사망 최소화를 위한 관리에 주력하면서 오미크론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는 오명돈 국가감염병인상위원회 위원장이 오미크론 질병 부담에 대해 발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 반장은 “60세 이상의 연가 사망자 수와 폐렴, 결핵, 교통사고 등의 사망자 수와의 비교를 통해 오미크론의 질병 부담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해 방역전략이 수립돼야 한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3일까지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와 방·의료분과위원회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이슬기자